

농민수당 지급액 결정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을

두세훈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감서 “제도적 근거 미비”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북도는 총 10만6,399농가에 642억8,00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000만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 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의원은 “현재 전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세훈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농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의 경우,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지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에 전북도는 이 통장 위원장과 마을 주민 등 4인으로 구성된 마을경작자실확인위원회를 통해 살거주·실경작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도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덧붙여 두세훈 의원은 “광역자치체 중 처음으로 전북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장 수당 지급에 급급해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결정 및 지급 절차나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후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과학기술 분야 기술혁신 활동 기여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 전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전북도가 10일 과학축전 개막식에서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육성에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인 ‘제1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북도 과학기술인 대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으로 전북도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첫 번째 전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자에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인 허진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2차전지의 주요 부품인 일렉트로닉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었으며, 수소저장용 탱크 기술은 일본의 도요타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렉트로닉 혁신공장 증설(1조 원 투자), 탄소강 및 합금강 실리사 강관 생산을 위한 일실 일진제강

2000억원 투자 수소산업의 핵심인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일진하이솔루스 완주공장 증설(128억원 투자) 등 전북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해진 도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과학기술인 대상은 전북도 과학기술 진흥으로 도내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묵묵히 성과를 내신 분을 발굴해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수상한 허진규 회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과학기술인

이 전북에서 예우와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인 대상 선정은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총 13명의 후보자가 접수됐으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과학축전개막식에 상패와 메달을 받고, 전북도 인재개발원의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 조례가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비위 질타

교육위, 교육청 행감서

최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위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0일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인을 변명히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감사관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는 전·현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자, 교육지원과 출납원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번 사건은 결재라인에 있는 관계자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달 일상경비

잔액이 불일치한데도 바로잡지 않았고, 하물며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관계자가 바뀌고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었다.

강용구 의원(남원)은 “올 9월에 발령받은 교육지원과장에게 9월 이후 공금횡령 사실이 44번 발생했음에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문자서비스도 등록하지 않고, 방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묻고,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본인의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회계 업무와 관련된 법과 규칙 등을 토대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지켜졌어야 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익원대의 횡령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요구했으나, 이날 참석한 증인들 모두 일관적으로 죄송하다, 몰랐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런 변명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던 업무 담당자 모두가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꼴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농산경위 “생생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0일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문화·학습활동 등을 위한 비우체 지원사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외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낮은 산업단지 분양률과 목표대비 부족한 입주기업 현황을 지적하고, 향후 입주기업 유치에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 농식품부 동향을 파악해 인식사와 의미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위 “악취발생 민원 해소 적극 대응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0일 전북도 환경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은 “악취 관련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증가하는 원인 파악과 적정한 행정절차와 기준을 통한 허가 시행을 통해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4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대표적인 악취발생 원인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의 권한 한계를 언급하며, 주민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행자위 “인구정책, 도민 피부에 와닿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은 “사람의 그림PC 접수 건수(423건)에 비해 보급 대수(212대)가 부족하다”며 “시·군, 공공기관과 적극 소통해 중고PC 무상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인구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전북인구 180만이 무너진 이후 매월 천명 이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순수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우수정책들을 연구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구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국 의원(정읍)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도가 도입의 효과를 얻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고향이 아닌 지역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역사랑기부제’ 등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이 대해 고민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택 의원(무주)은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실용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이나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건위 “예술인 지원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정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전북도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민 위원장은 “도립미술관이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미술관 외부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 놀이시설 변경, 실내·외 휴식공간 및 화장실 설치 등 미술관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을 계획했다”면서 “하지만 수차례 설계 변경과 동결기 공사 중지 등으로 원공 일자가 지연돼 기본구상으로부터 3년이나 흐른 현재 시점에서도 사업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봉근 의원(전주)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 문화예술분야 긴급 지원을 일부 하고 있지만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상시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세계세비엔날레관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 용역단계부터 주변 시설과 조화가 되지 않는 공간구성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조세정책 공정보도 위해

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 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은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

표이사과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로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 최갑욱(열린민주당), 권인숙, 김용민, 김종민,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유호상 기자

“내실 있는 감사 심도 있는 감사”

박선전 전주시의회 행정감각위 위원장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성역 없는 감사사를 약속했다.

10일 전주시의회 박선전(전북, 인후1·2·3·4·5·6·7·8·9·10·11·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감사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감사 일정은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전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던 지난해와는 달리 14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함으로써 성역 없는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은 “행정위원회 박병술, 김현덕, 송상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허욱희, 송승용 최용철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송영진, 한승진,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현, 김문권, 박선전, 박윤정(부위원장), 서운근 의원 등이다.

박 위원장은 “총합경정장 활동 방안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구도심 슬럼화 대안, 통합청사 신축, 시민서비스 마일 신·개축, 에코시티 개발 문제 등 전주시를 둘러싼 각종 의문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하겠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민주정부 4기 수립 원동력 될 것”

이원택 의원, 민주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대선 전략과 농어민조직을 총괄하게 됐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과 조직본부, 상황실은 3대 핵심기구로 꼽히고 있다. 초선임에도 선대위 핵심 기구인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의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 최대의 수산인 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에서 수여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10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산분야 농업용 전기 확대 적용 촉구, ▲전국 섬 주민 여객운임 1천원당일 요금제 실시, ▲수협위원장 현대화 사업 촉구 등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수산인들이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고맙기도 하지만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연이어나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